

수당·숙식비 최저임금에 미포함땐 外人근로자가 더 받아

최저임금 산입범위 토론회

업종·연령·지역별 차등적용 주장
“일본·캐나다·호주 등에선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이달 중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에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음식점업, 농·임·어업, 이·미용업,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등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55세 이상 또는 일반 근로자, 공무원 정년인 60세 이상 연령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을 덜 올리는 등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간 차등화도 마찬가지다.

다만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자’라는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자’는 토론회를 통해 최저임금 제도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주제의 토론회에서 기초보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통해 임금격차를 줄이고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4% 늘어난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할 바 있다.

노 연구위원이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월 기본급 130만원, 상여금 연 600%,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 월 40만원 등 매달

총 235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 A씨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례를 보면, 이 회사는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위반하고 있다.

A씨가 받는 기본급, 즉 월 130만원이 올해 최저임금인 월 157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입범위가 협소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에서 상여금, 수당, 숙식비 등을 제외하고

있지만 산입범위는 ‘명칭’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뤄지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현장에서 생각하는 상식수준의 임금과 법적 기준에 괴리가 존재하는 만큼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는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 숙박비(85%)와 식비(86.3%)의 80%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간 임금이 역전되는 불평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

려도 나오고 있다.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차별화도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내용이다.

최저임금법 역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적인 근거도 충분하다는 말이다.

노 연구위원은 단계별로 ▲최저임금 미만율 20% 이상 업종(1단계)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산업 평균(1700만원)보다 낮은 업종(2단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산업 평균(6200만원)보다 낮은 업종을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고, 종업원 1인당 성과가 낮은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화는 일본, 캐나다, 호주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일반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남측 평화의 집서 오늘 ‘남북 고위급회담’

‘판문점선언’ 후속조치 착착

리선권 등 北 대표단 5명 구성
8·15 이산가족 상봉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담은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이후 후속조치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우선 남북은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16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당·정·청도 1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한 일정 없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은 지난 8일 우리 측이 14일 열자고 북측에 제의한 이후 북측이 다시 16일로 하자고 수정제의하면서 최종적으로 날짜가 잡히게 됐다.

통일부는 이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16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대표단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북측은 수행원, 지원인원, 기자단 등 총 29명을 대표단으로 보낸다고 통보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우리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5명 내외의 대표단을 구성할 예정



이날엔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총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반장식 일자리수석. /연합뉴스

이다. 이에 따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6월12일로 잡히는 등 북미관계의 급진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의 다른 한 축인 남북관계도 이번 고위급회담을 계기로 관계 발전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달 중순에 고위급 회담을 연다는 정부 계획대로 남북관계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미회담과 함께 남북관계 일정도 병행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담에선 우선 ‘판문점 선언’에 담긴 여러 합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분야별 회담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등을 논의할 장성급 군사회담,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위한 적십자회담, 아시안게임 공동참가를 위한 체육회담 등의 일정도 잡아야 한다.

장성급 군사회담은 ‘판문점 선언’에 5월에 개최 일정이 박혀 있고, 적십자회담과 체육회담은 각각 8월로 예정된 이벤트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치와 인적 구성, 개소 시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것 외에는 공식일정을 잡지 않는 등 모든 초점을 한미정상회담에 맞춘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다음 주 초에 한미정상회담이 있는 만큼 거기에 집중하는 차원”이라며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야 하는지 등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는 민주당에선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4명이, 정부에서는 이 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남표 경제수석 등 5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승호 기자

박원순의 3選 도전 첫 발은 ‘송파’

최재성 후보 지원 송파구 선택
“서울의 승리가 전국 승리 견인”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첫발을 내딛은 곳은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격전지’ 송파구였다.

박 후보는 오전 7시 20분 송파구 잠실 새내역 앞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출정식을 대신했다. 송파를 재선거에 출마하는 같은 당 최재성 후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행보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서울의 승리가 수도권의 승리, 나아가 전국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하고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승리의 야전 사령관으로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리를 함께한 최재성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와 박성수 송파구청장 후보를 소개하며 “송파에서 승리해야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을 향해 “제2의 정권 교체 꼭 이뤄주시기 바란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어 송파구에서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 앞 시장을 돌며 시민들과 만난 뒤 탄천 일대를 찾았다.

그는 오후 서울내 또 다른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인 노원병을 찾아 같은 당 김성한 후보 및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중구와 중랑구에서 민주당 구청장 후보를 ‘지원 사격’했다. 이들 두 곳은 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이 각각 3선과 재선 도전에 나서는 곳이다.

박 후보는 오는 16일께 선거대책위원회를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선대위원장은 서울지역 민주당 3선 국회의원 위주로 꾸리고, 노동운동가 출신 비례대표 이용득 의원이 합류한다. 선대본부장은 남인순·홍익표 의원이, 비서실장은 김영호 의원이 맡는다.

수석대변인은 고용진 의원이 맡게 되며, 대변인으로는 박양수 전 서울시원과 김민 전 민주당 디지털대변인이 활동한다. /김현정 기자 hjk1@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을 찾아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후보, 박성수 송파구청장 후보와 함께 어린이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스1